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7. 19. / (총 14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박 은 정 한 연 수	전 화	044-202-1711 044-202-1714
종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	과 장 담 당 자	김 성 훈 박 현 수		044-200-2293 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	팀 장 담 당 자	김 정 숙 조 현 숙		044-202-1720 044-202-1723
중앙사고수습본부 진료지원팀	팀 장 담 당 자	김 국 일 강 민 구		044-202-2420 044-202-185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수도권 방역강화조치 조정방안, ▲호흡기 전담클리닉 추진상황, ▲해수욕장 등 관광지 방역대책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 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수도권 방역강화조치 조정방안, ▲호흡기 전담클리닉 추진상황, ▲해수욕장 등 관광지 방역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후 6개월 된 오늘까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진들의 헌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 끝까지 긴장감을 갖고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최근 수도권 상황이 호전되어 공공시설 운영이 곧 재개함에 따라 현재 거리 두기 1단계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 운영을 제한하고 있는 타 지자체도 이번 수도권 조치를 참고하여, 확진자 수·지역주민 요구 등을 감안하면서 방역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 또한 지난 13일 집중호우로 인해 수로 작업자 사망사례를 지적 하면서,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예보되어 있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재산과 인명피해가 없도록 행안부와 각 지자체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신속히 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아울러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도 현재 상황에 맞게 재검토가 필요 하다고 하면서, 입장 관중 수 제한, 방역수칙 준수 등의 조건을 고려 하여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정부에 주문하였다.

1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7월 5일(일)부터 7월 18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1.4명으로 이전 2주간(6.21.~7.4.)의 31명에 비해 9.6명 감소하였다.
- 특히 이번 주(7.12.~7.18.)는 국내 발생 환자 수가 10명대(15.9명)로 나타나 국내 감염은 계속 감소하는 양상이 유지되고 있으며,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호남권의 환자 발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수도권의 환자 발생 규모는 10명대*로 줄고 있다.

* 최근 2주간의 수도권의 1일 평균 환자 수는 10.2명으로 이전 2주간(6.21.~7.4.)의 19.3명에 비해 9.1명 감소

- 지난 2주간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의 비율은 7%대로 낮아졌고, 집단감염 발생 수도 직전 2주간(6.21.~7.4.) 16건에서 9건으로 줄었으며,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은 80%에 근접하고 있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6월 21일 ~ 7월 4일		7월 5일 ~ 7월 18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31.0명		21.4명
수도권	19.3명		10.2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15.8명	⇒	27.4명
집단 발생 ¹⁾ (신규 기준)	16건		9건
감염 경로 불명 비율	8.7% (57/655)		7.8% (53/683)
방역망 내 관리 비율 ²⁾	80% 미만		80% 미만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해외유입 환자는 지난 2주간 1일 평균 27.4명이 발생하였으며, 그 전 2주(6.21.~7.4.)에 비해 11.6명이 증가하여 전 세계적인 유행 확산에 따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최근 외국인 근로자, 교대 목적으로 입항한 선원과 이라크에서 입국한 우리 건설근로자 중 다수가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 다만, 해외입국자는 모두 2주간의 격리와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유입 환자는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어 이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위험성은 거의 없으나,
- 이는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7월 20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6개국으로 확대하는 등 해외유입에 대한 방역 관리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 (방역관리 강화 조치) 비자 제한,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은 60% 이하로 운항 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모든 관리지표가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코로나19 유행의 국내 확산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억제하며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있으나,
- 수도권과 호남권의 환자 발생이 계속 직장, 친목 모임 등 소규모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어, 긴장을 늦출 시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 아울러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 확산에 대응하여 개방성 원칙은 준수하면서도 틈새 없는 검역과 격리뿐 아니라, 해외에서 귀국하는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조정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수도권 방역강화조치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5월 29일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운영 중단,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등 강도 높은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한 8천여 개 여가성 공공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불요불급한 공공행사를 연기하는 한편,
- 학원, PC방,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감성포차, 콜라텍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조치와 전자출입 명부 도입을 의무화하였다.

□ 최근 수도권에서 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감염 위험성이 낮은 공공시설 운영 중단으로 오히려 저소득층의 접근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조정 방안을 마련하였다.

* 수도권 강화 조치 이후, 1주간(5.29.~6.6)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34명이나, 최근 1주간(7.12.~7.18)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11명으로 67% 감소

< 수도권 강화조치 이후 vs 최근 1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 >

구분	5.29~6.6	6.7~6.13	7.5~7.11	7.12~7.18
수도권	34.2명	40.4	9명	11.4명

○ 7월 20일부터 수도권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은 입장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도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재개한다.

- 중앙박물관, 현대미술관, 중앙도서관 등 10개 기관*은 수용인원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예약제를 통해 많은 사람이 밀집되지 않도록 하되 시간당 이용 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현장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중앙박물관, 민속박물관, 역사박물관, 한글박물관, 현대미술관(과천, 서울, 덕수궁), 중앙도서관(중앙, 어린이청소년), 장애인도서관

- 국립중앙극장, 예술의 전당 등 8개소*는 수용인원을 50%로 제한하여 기획공연과 민간 대관을 할 수 있다.

*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본원), 정동극장, 예술의전당, 국립극단(명동예술극장, 백성희·장민호 극장, 판), 대학로·아르코 극장

- 국립고궁박물관도 일일 최대 1,000명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궁궐과 왕릉도 개방한다.

○ 다만 이번 조치에 야구, 축구 등 프로스포츠의 관중 입장 허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전국적인 환자 발생 추이를 고려하여 향후 검토할 예정이다.

○ 또한,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와 전자출입명부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는 계속 유지한다.

* 5월 29일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와 별개로 6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고위험 시설의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 시행

-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대상이었으나 고위험시설에 속하지 않는 PC방, 300인 미만 소형학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방역조치 조정에 따라 운영을 재개하는 시설에 대해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3 호흡기전담클리닉 추진 상황

- 정부는 호흡기·발열 환자의 진료 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도입하고 있다.
 -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코로나19와 증상 구분이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일차 진료를 담당하게 되며,
 -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 등에 장소를 마련하여 지역 내 의사가 돌아가며 진료에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형 클리닉”으로 구분된다.
 - 최근 500개소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이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총 1,00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지정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우선으로 하되 “병원”급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으며, “병원”급 국민안심병원의 호흡기 전용외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의사 1명 이상, 간호인력 1명 이상, 진료보조(체온측정, 진료접수 등)·행정·소독을 담당하는 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 “비말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구조적 동선 분리와 환경관리 요건(환기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접수, 대기실, 진료실, 보호구 탈의실, 검체채취실, 방사선촬영실 등 각 구역에는 감염 예방 설비·물품*을 구비할 예정이다.

* 손 소독제, 환경소독용 티슈, 이동형 음압기, 공기 흐름 제어(권장) 등

- 전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하절기 등 환자가 적은 시기에는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협의하여 운영시간을 조정(예. 오전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되면 감염 예방 시설·장비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소당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 지정일로부터 감염예방관리료(20,630원)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의료기관 대비 높은 수가를 적용하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이용하는 환자의 추가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 또한, 진료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인력을 올해 한시적으로(4개월) 1명 이상 지원*할 예정이다.
- * 3차 추경 ‘의료기관 등 방역인력 지원’ 사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소당 관내 1개소 이상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되 인구수에 따라 추가 설치하는 한편,
 - 설치유형(의료기관형/개방형), 시설규모 등은 시군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 또한 시도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선도 모형을 발굴하여 홍보 등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4 해수욕장 등 관광지 방역 대책 (전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름철 해수욕장 방역 관리 대책을 점검하였다.
 - 정부는 해수욕장의 방역관리를 위해 6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반을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방역상황을 점검토록 하고 있으며, 이용객 분산을 위해 해수욕장 신호등과 해수욕장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 지난 7월 3일에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을 추가·보완하여,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하천·계곡, 수상레저, 수영장 등 여름철 주요 휴가지에 대한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 각 휴가지 시설의 책임자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현장 안내하는 한편,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역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 맞춤형 방역대책의 한 사례로 전라남도의 「여름철 해수욕장 방역관리 대책」 추진상황이 소개되었다.
 - 7월 19일 현재 전라남도에서 개장한 해수욕장은 총 50개소이며 발열체크 후 손목밴드를 착용해야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 간 차양시설 거리 준수, 임시 격리장소 확보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 전국 최초로 사전예약제를 시행한 전라남도는 7월 19일 현재 12개 해수욕장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온라인(네이버, 바다여행)과 현장접수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 명사십리 해수욕장의 경우, 7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집합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혼잡도 단계별로 이용객의 입장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 이와 함께 7월 10일부터 58개 해수욕장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 시설물 관리실태를 합동 점검하는 등 해수욕장 현장대응 체계를 구축·운영 중에 있다.
-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 7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함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유원시설, 야영장 등 922개소에 대해,
- 전자출입명부 도입, 관광지 마스크 판매처 확보, 발열 체크, 소독제 및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 비치 여부 등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피서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지난 5월 연휴를 전후로 발생한 집단감염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을 상기하면서, 가족 단위의 소규모 인원으로 한적한 야외의 휴가지를 고르거나, 관광객이 몰리는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 개별 차량으로 이동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5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18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4,494개소, ▲병·의원 292개소 등 40개 분야 총 14,286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미작성 등 69건에 대해 현장 지도를 하였다.
 - 강원에서는 음식점·카페 등 238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18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 충북에서는 병·의원 52개소 등 187개소를 점검하여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18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87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81개반, 654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278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1,588개소를 점검하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18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3,18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9,20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973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905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7.18)는 갑갑함을 이유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확인하여 계도조치 하였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4개소 2,739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48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7월 18일) 입소 224명, 퇴소 188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40명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 일반국민 10대 수칙
 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 수칙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5.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6.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일반국민, 격리자, 확진자)
 7.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8. 잘못된 마스크 착용 주의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